

「석탄산업법」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수립된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11~’15)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011년 3월 8일
지식경제부장관

석탄산업 장기계획(‘11~’15)

2011. 3. 8.

지식경제부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목 차

I. 수립배경	1
II. 국내 석탄산업 현황	2
III. 석탄산업 정책(‘06~’10) 평가	6
IV. 석탄산업의 과제	11
V. 석탄산업 장기비전과 발전전략	15
VI. 석탄산업 장기정책 방향	17

I. 수립 배경

□ 수립 필요성

- 석탄산업 장기계획은 「석탄산업법」 제3조에 따라 **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의 안정적 수급, 탄광지역진흥** 등을 위한 계획
- 현행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06~‘10)”은 **‘10년말 종료되어 차기 5개년 계획(‘11~‘15)을 수립·공고할 필요**가 있음

□ 수립 경위

- ‘91. 1 :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91~‘01)” 수립
- ‘01. 7 :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01~‘05)” 수립
- ‘06. 2 :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06~‘10)” 수립
- ‘10. 3~‘11. 1 :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
- ‘10. 3 ~ ‘11. 1 :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
- ‘10. 7, ‘10. 12 : 장기계획 수립 워크숍 개최
- ‘11. 1 : 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발표회겸 공청회 개최
- ‘10. 12~‘11. 1 : “석탄산업 장기계획(‘11~‘15)”(안) 협의 및 작성

- 1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II. 국내 석탄산업의 현황

1. 국내 석탄산업 변천

□ 석탄산업합리화정책(‘89년 시행)에 따른 국내 석탄산업 규모 축소

- ‘60년대부터 난방 및 취사연료 공급을 위해 증산을 유도하여, **‘80년대에는 연간 약 2,400만톤까지 생산**
-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및 청정연료 선호 등으로 인해 석탄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**‘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정책(비경제탄광 폐광)을 추진**
- 현재 무연탄 **생산량**은 폐광·감산(탄광 노사간 합의로 자율결정)으로 **‘10년 기준 210만톤**으로 ‘89년 이전 대비 **9% 수준으로 감소**
 - * 탄광수 : (‘88) 347개 → (‘10) 5개 (△342개 탄광)
 - * 생산량 : (‘88) 2,429만톤/년 → (‘10) 210만톤/년 (△2,219만톤)
 - * 근로자 : (‘88) 62,259명 → (‘10) 4,050명 (△58,209명)

□ 합리화정책에 따른 석탄산업 붕괴방지와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지원 지속

- 석탄·연탄의 **최고판매가격을 고시**하고, 석탄·연탄 **가격보조, 석탄 비축 등에 재정지원**
 - * 석탄(원/톤) : (‘10년)제조원가(147,045) - 판매가격(128,746) = **정부지원(18,299)**
 - * 연탄(원/개) : (‘10년)보조금 없을시 가격(754) - 소비자가격(490) = **정부지원(264)**
- 폐광 또는 감산시 전업지원 등을 위한 대책비 및 시설 정리를 위한 **광업자 대책비** 지급

- 2 -

2.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

- ☐ (공급) '10년에는 5개 가행탄광에서 약 210만톤 생산
 - * 가행탄광 생산량 : 석탄공사 113만톤, 경동 80만톤, 태백 15만톤 수준
- ☐ (수요) 무연탄 수요는 민수용 연탄과 무연탄 발전용이며 최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('10년 270만톤)
 - 연탄수요는 유가의 변동,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관리 등에 의해 점진적 감소 추세
 - * ('06) 233만톤→('07) 209만톤→('08) 229만톤→('09) 194만톤→('10) 186만톤
 - * 연탄가격은 '89년 이후 '03년에 10%(167원/개→184원/개), '07년에 20%(184원/개→221원/개), '08년에 30%(221원/개→287원/개), '09년에 30%(287원/개→373원/개)
 - 발전용 수요는 정책적 수요로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축소
 - * ('06) 236만톤→('07) 216만톤→('08) 196만톤→('09) 136만톤→('10) 84만톤
- ☐ (수급안정화 조치) 수급상 불균형은 무연탄 수입 및 비축탄(재고량: '10년말 131만톤) 방출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유지
 - * 연탄수요량을 감안시 100만톤 수준의 비축량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

< 국내 무연탄 수급 현황 >

구분(만톤,%)	'06	'07	'08	'09	'10
소 비	472	425	426	330	270
연 탄 (증감률)	233 (15.9)	209 (△10.3)	229 (9.6)	194 (△15.3)	186 (△4.1)
발 전	236	216	196	136	84
공 급	509	412	419	320	254
생 산	282	289	277	252	208
수 입	-	-	1	19	17
비 축	467	344	203	160	131



3.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

- ☐ 국내 석탄산업과 관련한 재정지원은 매년 5,500억원 내외로 예탁 회계(투자계정: '10년 3.3조원)의 약 17%를 차지

< 국내 석탄산업 재정지원 주요내용 >

구 분(억원)	'06	'07	'08	'09	'10	계
광산안전지원	221	35	35	35	35	361
연탄가격지원	2,634	3,545	3,121	2,775	1,865	13,940
폐광대책·광해 방지지원	1,882	1,493	2,492	2,273	2,728	10,868
석탄공사출자	450	610	536	530	530	2,656
계	5,187	5,683	6,184	5,613	5,158	27,825

- 석탄 및 연탄의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최고판매가격과 생산원가와의 차액을 국가재정으로 보전 중

< 석탄·연탄 생산원가 및 지원단가 ('10년 기준) >

구 분	생산비(a)	판매가(b)	정부보조(a-b)
무연탄(원/톤)	147,045	128,746	18,299 (12.4%)
연 탄(원/개)	564.85	373.5	191.25 (33.9%)

* 연탄수송비는 별도 지원 : 24.75원/개

- ☐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국내 무연탄과 수입 무연탄과의 가격 차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
 - * 지원현황(억원): ('06) 2,254 → ('07) 1,883 → ('08) 1,438 → ('09) 430 → ('10) 60

4. 폐광·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원 현황

- ☐ 폐광·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
 - ‘10년까지 **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**(’97~’05), **탄광지역개발사업**(’01~’10), **대체산업창업융자사업**으로 총 1.6조원을 지원
 - 이에 따라 폐광·탄광지역내 도로·하천 등 **기반시설 확충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**
- ☐ 강원랜드 등 석탄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**폐광지역 경제자립화 추진**
 -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은 **안정적 수익을 창출**하고 있음
 - * ‘09년 기준으로 카지노 11,516억원으로 총매출 12,067억원 중 95% 차지
 -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**국세·지방세 납부, 폐광지역개발기금^{*}·관광진흥개발기금^{**}**을 조성, **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진흥사업**에 활용
 - * 강원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% 납부
 - **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0% 납부
 - 한편, 카지노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**스키·콘도 등 가족형 종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** 중이며 **지역과 연계한 사업도 시행** 중
 - 폐광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**강원랜드 이익금을 활용**하여 **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**(자본금 600억원) **설립**
 - * 폐광지역 2단계 투자계획(’02.11월)에 따라 광해관리공단, 강원랜드, 해당지자체가 출자
 - * 문경레저타운(’03.2), 블랙밸리CC(’04.8), 동강시스타(’06.5), 대천리조트(’07.12) 설립, 화순법인 설립 준비중

- 5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Ⅲ. ‘06~’10년 석탄산업 정책 평가

1. 석탄산업합리화정책 평가

- 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안정적 마무리 단계로서 **공급기반이 약화된 반면, 연탄수요는 큰 변동이 없어 발전용 공급을 축소**
 - **공급 측면**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**폐광 및 감산으로 생산기반이 악화**
 - 반면, **수요**는 연탄 가격보조금 지원에 따라 **연탄가격이 난방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**하여 도시화가 가속됨에도 불구하고 **꾸준히 유지**
 - * 연탄수요(만톤) : (’06) 233 → (’07) 209 → (’08) 229 → (’09) 194 → (’10) 186
- ☐ 석탄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**정부 지원 예산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**
 - 탄광의 **생산지원보조금 폐지** 및 **연탄 가격인상**에 따른 석탄산업에 지원되는 **재정지원은 감소 추세**
 - * 재정지원(억원) : (’06) 2,855 → (’07) 3,580 → (’08) 3,156 → (’09) 2,810 → (’10) 1,900
 - 다만, 폐광에 따른 **광해방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증가**
 - * 광해방지사업(억원) : (’06) 250 → (’07) 800 → (’08) 720 → (’09) 740 → (’10) 790

2. 중장기 무연탄 수급안정화 대책

- (공급) 무연탄 수급 안정화를 위해 **일정 생산량 유지 및 공급 확대**
 - 감산·폐광을 지속 추진하여 '10년 5개 탄광에서 **연간 210만톤 생산규모 유지**
 - * 무연탄생산량(광산수): '06년 282만톤(7개) → '10년 210만톤(5개)
 - 민수용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**발전용 일부를 연탄용으로 전환하여 공급 물량을 확대**
 - * 발전소용 물량(만톤) : ('06) 236 → ('07) 216 → ('08) 196 → ('09) 136 → ('10) 84
 - 발전용을 연탄용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, **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축탄 방출 및 무연탄 수입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**
 - * 비축탄 방출(만톤) : ('06) 227, ('07) 123, ('08) 142, ('09) 43 ('10) 29(재고 131)
 - * '08년 시범사업(1만톤)후 '09년 19만톤, '10년 17만톤 등 총 37만톤 수입
- (수요) 석탄·연탄의 **가격 인상**을 통한 **국가재정 부담 완화** 및 **수요 관리 정책** 지속 추진
 - 연탄가격의 점진적 현실화를 통해 **정부 재정부담 경감** 및 **연탄 수요관리**
 - '09년 연탄가격 인상으로 '08년 대비 **소비가 약 15% 감소**, 이는 **가격 탄력적 시장인 비가정부문(대량소비 가정 포함) 때문인 것으로 추정**
 - * 연탄 소비량은 연탄가격 이외에 난방도일, 유류가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소비 추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7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3.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체계 개편

- 무연탄 수급 조절 및 정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**석탄·연탄 가격 인상을 통한 가격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**
 - 석탄은 '05년 이후 매년 10~15% 인상('09년 7.15%)하였고 연탄은 '07년 20%, '08년과 '09년 30% 인상
-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**저소득층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**하기 위해서 **가격 인상분만큼 연탄쿠폰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·시행**
 - 시범사업('07년)을 거쳐 '08년, '09년, '10년 각각 가구당 7.7만원, 15만원, 16.9만원 지원
 - 시범사업을 통해 **연탄쿠폰 지급대상자를 확대**하는 등 **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**
 - * ('07) 기초생활수급자 4.1만가구, ('08)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7.2만가구, ('09)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소외계층 8.2만가구, ('10)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소외계층 8만가구
-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**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 합리적 개선**
 - 기존은 국내 무연탄과 수입 유연탄 가격차이 지원방식에서 **국내 무연탄과 수입 무연탄의 가격차이 지원방식으로 개선**
 -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국내 무연탄 소비를 위한 무연탄발전 지원사업은 **발전용 공급량 축소에 따라 총 지원금은 감소**

- 8 -

4.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

□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속추진 및 폐광지역개발 자원 규모확대

- '01~'10년간 탄광지역개발사업('99.12월, 정부-태백주민 합의)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노출
 - * 탄광지역개발사업 : '01~'10년간 7개 시·군에 8,142억원 지원
- 폐특법 시효연장(~'15년)'05.3월)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재원을 강원랜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%에서 20%로 확대
 - * 폐광지역개발기금 : '06~'10년까지 4,184억원 지원

□ 대체산업 유치촉진 및 발굴 등을 통한 폐광지역 경제기반 강화

- 정부의 폐광지역 대체법인설립 및 강원랜드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
 - * (대체법인) 문경레저타운·블랙밸리CC·동강시스타·대천리조트 설립, 화순 법인 설립준비중(광해공단·강원랜드·지자체·민자 출자: 600억원)
 - * (강원랜드) 태백 E-City, 삼척 스위치백리조트, 영월 모터스포츠패밀리리조트, 정선 탄광문화관광촌(총 사업비 약 5,000억원)
- 대체산업창업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업·관광산업 유치 등 석탄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('06~'10년 297.5억원)

□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효과가 여러 가지 지표로 가시화

- 폐광지역에 대한 제도적·재정적 지원으로 폐광지역의 성장은 각종 통계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임
 - 특히, 지역성장의 중요지표인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어 안정화 추세

- 9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<주요 성장지표에 대한 지역별 비교>

지표 (단위)	전국	강원도	신활력지역 30%	폐광 지역	신활력 지역평균
최근 3년간 연평균 인구변화율 (%)	0.56	0.10	0.58	-0.94	-1.07
최근 2년간의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(%)	3.14	4.25	4.77	5.52	6.89
최근 3년간의 재정력 지수 평균	0.370	0.215	0.173	0.156	0.123
최근 2년간의 1인당 지방세징수액 평균 (천원)	858	715	748	580	515

* 주요 성장지표는 일본의 폐광정책에 사용된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
(출처: 에너지경제연구원(2009))

- 정책지원으로 탄광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통한 지역산업 안정·건전화에 기여

□ 폐광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 노출

-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관광산업(리조트, 골프장 등)에 투입돼 제조업 등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투자는 미진
- 폐광지역 지자체들은 모든 사업을 국비에 의존한 결과, 실속 있고 건전한 사업보다는 선심성 사업이 지배적
-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비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

5. 석탄산업 관련 공적 기능 재정립 및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

□ 석탄공사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이행 및 경영혁신 추진

- 인력·조직·예산의 축소 및 자산매각,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에는 한계가 있음
- 광업소별 독립사업부제를 통해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내부역량 증진에 주력
- 석탄공사 역량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석탄가스화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, 경영정상화 노력 중

- **광해방지 전문기관 설립**을 통한 **광해방지사업 체계적 이행**
 - **광해방지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**하기 위해 **광해방지법을 제정**하고 이에 근거한 **광해방지 전문기관 설립**(’06)
 - 광해방지법에 따라 “**광해방지기본계획(’07~’11)**” 수립·시행(’06.10)
 - 5년간 광해복구가 시급한 1,344개소(가행광산 739, 폐탄광 215, 폐금속광 390)에 5,401억원 투자 계획

IV. 석탄산업의 과제

1. 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한 무연탄 수급 안정화 방안 필요

- **국내탄의 적정 생산량 유지 및 수요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화 필요**
 - 무연탄의 광량·품질 등 **채탄여건**과 저소득층 **연탄수요**를 고려시 연탄을 타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**적정 수준의 생산량 유지**
 - 국내탄 **생산량 증가가 불가한 상황**에서 **경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석탄·연탄 가격인상**을 통한 **수요관리 정책 강화**
 - 아울러 정책적 시장인 **발전용 수요를 축소**하고, 수입을 **탄력적으로 운용**하여 **민수용 연탄의 수요 충족**을 위한 **공급 여력 증대**
- **가격인상에 따른 연탄사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보완이 필요**
 - 저소득층 연탄보조는 그간의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**가격인상분만큼 저소득층에 연탄쿠폰을 발급**하여 **연료비 부담을 경감**
 - 하지만, 향후 단계적으로 연탄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대상자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**연탄쿠폰 지급액 규모의 합리적 산정**이 필요

- 11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- **비축무연탄의 소진에 대비한 비축탄의 수급 조절 기능 강화 필요**
 - 연탄용 수요 충족을 위해 발전용 배정물량 축소에도 불구하고, 생산량 증가가 불가능하고 그간 **수급 불균형을 조절한 비축탄도 감소**
 - 따라서 수요관리 정책 및 무연탄 수입을 조화롭게 구사하여 **적정 수준의 비축탄(약 100만톤) 확보 방안 강구**가 필요

2. 석탄산업 관련 재정지원 경감 대책 강구 필요

- **무연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**
 - 석탄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**무연탄의 생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60% 내외로 과도하게 차지**하고 있음
 - 생산원가 : (석탄공사) 172,961원/톤, (민영탄광(경동)) 145,398원/톤
 -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**경영진은 전향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소극적**이고 근로자들도 무사안일의 의식구조 팽배
 - 고비용 인력구조를 보다 **저비용 구조로 전환**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계화 및 채탄로봇기술 도입 등 **생산성 향상 도모**
- **석탄·연탄 보조, 석탄공사 지원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한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**
 - 석탄·연탄 가격지원, 석탄공사 지원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등 **석탄산업 관련 지원**이 각기 다른 항목으로 **별개 사업처럼 지원**
 -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성장 틀을 만들어가는 현 추세에 역행하며 **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약**

- 12 -

3. 석탄·연탄의 생산·유통·품질관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

- ☐ 석탄·연탄의 생산·유통·품질관리 등 석탄산업 전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
 - 국내탄의 광량 감소 등에 따른 석탄·연탄의 품질 및 유통관리 등을 개선하여 수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
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관리에 대한 연구 및 조직 구성이 필요

4. 석탄산업 관련 공적기관 기능조정 필요

- ☐ 석탄공사의 공적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 도출 필요
 - 석탄공사는 석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에도 불구하고, 경영여건은 가격 통제 및 차입금의 누적 등으로 악화되어 구조적 악순환 상태
 - 공기업 부채관리적 측면에서 석탄공사의 합리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
- 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업무 역할 재정립 필요
 - 광해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광해방지사업, 석탄·채정지원 사업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성
 - 이러한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의한 자원 집행 성격이 분명하나 광해관리공단이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제의 소지 야기
 - 업무 영역 확정 및 역할 재정립, 사업비 집행에 합리성 보장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직의 재정립이 필요

- 13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5.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비한 석탄 산업 자생력 강화

- ☐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경영전략 수립
 - G20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할 예정이므로 석탄업계는 시장기능 도입에 따른 경영전략 마련
- 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고 기존 석탄산업의 체질 개선 등을 위해서 국내 탄광의 기술력을 활용 가능하게 정책적 지원 필요

- 14 -

V. 석탄산업 장기비전과 발전전략

1. 장기비전

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국내 석탄산업 육성

☐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화 기반 구축

☐ 맞춤형 폐광지역개발 사업으로 경제자립화

☐ 개방화 추세에 따른 시장기능의 점진적 강화

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한 석탄정책 전개

< 장기적 국내 석탄산업의 모습 >

구 분	2010년	2015년	2020년	비고
생 산	210만톤	⇒ 200만톤	⇒ 150만톤 내외	△60만톤
소 비	270만톤	⇒ 170만톤	⇒ 150만톤	△120만톤
탄 광	5개	⇒ 4개	⇒ 2~3개	△2~3개
근로자	4,006명	⇒ 2,800명 내외	⇒ 2,500명 내외	△1,500명 내외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2. 발전전략

- ☐ 2015년 무연탄 수급균형 목표수립
 - 무연탄 생산 : 200만톤 수준
 - 무연탄 수요 : '11년 240만톤, '15년 170만톤 수준

* '11년(민수용 180만톤, 발전용 60만톤), '15년(민수용 120만톤, 발전용 50만톤)
- ☐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적정 재고량 유지(100만톤)
 - 연탄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연탄용 무연탄 수입을 고려
- ☐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
 -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정책 근간 구축

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석탄산업 입지 확보

정책조화를 통한 수요관리	균형적·안정적 생산체제 구축	맞춤형 폐광지역 개발 전략추진	합리적 지원정책 근간 구축
✓가격인상을 통한 연탄가격 현실화 ✓석탄·연탄 보조금 단계적 축소·폐지 ✓재정 부담 완화	✓민수용 위주 공급체제 구축 ✓석탄·연탄 가격 체제 유지 ✓국내 탄광의 경 쟁력 제고	✓경제 자립형 맞 춤형 개발사업 ✓자원 재원 운영의 새로운 방식 도입 ✓폐특법 시효연장 여부 검토	✓저소득층 지원 ✓생산·유통·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✓석탄활용기술 개발 및 상용화 보급

VI. 석탄산업 장기정책 방향

1. 수요관리 및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무연탄 수급 안정 도모

- ☐ 중장기적·단계적 석탄·연탄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관리 강화
 - 가정용 및 화훼농가 등 비가정용으로 구분되는 연탄소비자에 대한 연탄소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·분석
 -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, G20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계획에 따라, 중장기적·단계적인 석탄·연탄 가격 인상을 추진하여 수요관리 강화
 - * 2020년까지 석탄 및 연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철폐할 계획
- ☐ 석탄·연탄 가격체제 유지를 통한 안정적 생산체제 유지
 - 석탄·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유지하여 국영·민영탄광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유지
- ☐ 정책적 시장인 발전용 수요를 축소하고 잉여 무연탄은 비축하는 등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
 - 정책적 시장인 발전용 무연탄 수요를 축소(50만톤 내외)하고 무연탄 비축을 재검토하여 민수용 연탄 수요에 대비
 - 다만, 민수용 수요가 대폭 감소한다면, 잉여 생산량의 일부를 발전용으로 전환하여 수요창출

- 17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2. 석탄산업 관련 재정 지원 경감 대책

- 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기초한 국내 탄광의 경쟁력 제고
 - 폐광 또는 감산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정부 의존적 경영 탈피, 자율 경영환경 조성
 - 무연탄 생산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유도,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내 석탄산업의 경쟁력 제고
- ☐ G20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장기적·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를 추진
 -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이행을 위해 G20에서 논의된 석탄보조금을 중장기적·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 - * '10년 석탄생산안정지원금 폐지, '20년까지 연탄제조비지원금 폐지 계획
- ☐ 석탄산업 지원 재원을 재분류하여 합리적 집행방안 모색
 -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은 에특회계의 재원 등을 고려, 전력기금에서 에특회계로 이관을 검토
 - * 전력산업구조 개편전 한전이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던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이 구조 개편이후에도 전력기금을 통해 계속 지원하는 사업
 -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산재보험료 및 학자금 등 석탄산업 지원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식 도입검토

- 18 -

3. 맞춤형 폐광지역개발 사업 추진 전략

- ☐ 폐광지역개발사업협의회(가칭)를 구성·운영하여 경제자립형·맞춤형 폐광지역개발 사업 추진
 -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제자립형·맞춤형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
 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전문가 등으로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협의회(혹은 심의회) 구성, 주체별 역할정립 및 기능 강화
 -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, 유사 중복투자, 산술적 자원 배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-심사-수행-평가 시스템을 구축
- ☐ 폐광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·운영하는 체제 개편 추진
 - 강원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, 설립취지 등을 고려 정부 지원 위주에서 강원랜드 수익금 활용으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 경감
 - 폐광지역개발의 지속성·효율성 향상 및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위해 강원랜드 배당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
 - 향후 폐광지역에 설립된 대체법인이 정상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면 그 배당금도 폐광지역개발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
- ☐ 폐특법 제정취지 이행여부 및 강원랜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폐특법 시효 연장여부 검토

- 19 -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4. 합리적인 지원 정책의 근간 구축 방안

- ☐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친서민·에너지복지 정책을 실현
 - 수요관리 및 국가재정 경감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석탄·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연탄사용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부담 완화
 - 지원근거 명확화, 지원기준 재설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구현
- ☐ 석탄·연탄의 수급·유통·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민연료 사용자에게 대한 안정적 지원 기반을 구축
 - 생산, 유통, 품질관리 및 소비자 현황 등을 통합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
- ☐ 석탄산업계의 석탄채굴 및 연탄제조 등 축적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인력·기술지원 추진
 - 국제협력으로 자원이 풍부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중앙아시아, 몽골 등에 석탄 채굴 및 연탄제조 기술을 보급
- 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과적인 정부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
 - 광해공단의 기존 석탄·연탄 지원사업에 석탄·연탄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기능을 추가하고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

- 20 -

- 청정석탄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석탄산업의 체질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
- 청정석탄기술개발을 통해 연탄대체연료로의 활용을 제고하고 석탄산업 일정 규모유지를 위한 수요기반을 구축

5.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

- 민수용 연탄 수요가 일정량 유지되는 상황에서 석탄공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신증할 필요가 있음
 - 석탄공사의 분할 후 폐광, 민간매각 등 처리방안 이행은 '15년 연탄 수요, 민영탄광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시 무연탄 수급 차질이 우려
- 석탄공사는 자체 경영효율화를 통해 적자를 최소화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 다각화 모색
 - 민영탄광에 비해 1.19배(금융비용 제외) 높은 원가를 작업장 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민영탄광 수준으로 개선
 - 광업소별 독립사업부제 체제하에서 무연탄 유통·품질관리를 투명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경영계획서에 반영하여 관리
 - 석탄가스화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재무상황 개선을 추진
- 정부 정책상 발생된 석탄공사 부채에 대해서는 예특회계 재원을 고려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결손 보조 검토
 -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고시제도에 따른 구조적인 손실 부분은 정부의 결손 보조를 통하여 부채를 연차적으로 축소

